

경활인구 확보, 초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인구위기 대응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인구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분야별 심층 간담회 개최
- 전문가들은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 우수 전문인력 육성체계 마련,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건보지출 효율화, 건강관리 예방적 투자 확대 등을 제안
- 후속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발굴된 정책과제들은 중장기 국가전략 및 '27년 예산안 편성 등에 반영 계획

기획예산처는 2월 11일(수) 14시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인구위기 대응 분야별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제활동인구 확보'와 '초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목표·성과지표·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문가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6.2.11.(수) 14시~16시 /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제회의실
- (참석자) 기획예산처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 인구구조혁신과장 등
전문가 최형재 교수(고려대), 정창률 교수(단국대), 정현진 실장(건강보험연구원),
이창원 선임연구위원(이민연), 최효미 실장(육아연), 권정현 연구위원(KDI),
황남희 연구위원(보사연), 이지혜 부연구위원(보사연),

기획예산처는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중기: 2030, 장기: 2030+α)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으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1.16일 '인구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총론)'를 시작으로 분야별 심층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중고령자·외국인 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방안, 초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 및 의료·돌봄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문가들은 경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위한 유연근무 확대, 소규모 기업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AI·로봇 등 기술발전을 고려한 고령자 고용정책 설계,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육성 등 외국인 정책 개선도 제안하였다.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의 안정성 강화와 관련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설계, ▲전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 체계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적 투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자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초고령사회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축소사회 적응,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인구 분야별 후속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들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포함하고, '27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실 인구구조혁신과	책임자	과 장	나윤정 (044-214-1730)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halanadriid@korea.kr)
			사무관	오상혁 (dhtkd23@korea.kr)

